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2026. 10.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지출효율화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1

II .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13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2026. 10.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추진배경	5
II . 추진경과	6
III . 지출효율화 주요성과	7
IV . '27년 지출효율화 추진방안	10
V . 향후 추진일정	11

I. 추진배경

□ 구조적 난제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출수요 확대

- 현재는 인구감소, K자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
 -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대외적으로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 등 AI 기술패권과 첨단산업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
 -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AI, 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적극적 투자 요구

□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의 경직화는 투자여력을 제약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소요 확대 및 이자지출 부담 등으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할 투자여력 축소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 ('20) 49.9 ('22) 49.9 ('24) 52.9 ('26) 53.3

□ 편성시기 중심, 재정당국 주도의 지출구조조정에는 한계 존재

- 예산 편성시기(6~8월)에만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검토되어 의무·경직성지출, 다부처 협업과제 등 근본적 지출구조 개선에 한계
-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민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 미래대비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예산 순주기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출효율화 추진 필요**

II. 추진경과

① 민·관 합동의 상시적인 지출효율화 논의 체계 구축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과 연계하여 정부부처 및 민간·학계·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TF’ 출범('25.9월)
 - 12대 분야, 연금·보험, 총량, 총괄 등 15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41개 부·처·청과 총 80여명의 민간위원 참여
- 분야별 작업반에서 개별 지출효율화 과제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 쟁점사항 발생시 총괄반에서 부처·민간위원이 함께 논의·조정

②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 300개 이상의 과제 발굴

- (자체) 언론·국회·감사원·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대내외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100여개 과제 발굴
- (부처) 집행 현황, 정책 현장 의견 등을 감안, 110여개 과제 도출
- (민간) 학계·일반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130여개 과제 제안

③ 분야별 작업반 중심의 심도있는 논의로 개선방안 구체화

- 매주 작업반 회의를 개최('25년 30여회 → '26.9월말 104회)하여 과제를 구체화하고, 발굴과제에 대한 부처·민간위원이 상호검증 시행
- 민간 전문성을 활용, 과제별 절감효과, 정책 영향,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특히,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의 수용성 제고

Ⅲ. 지출효율화 주요성과

- ◇ 민·관합동 지출효율화 TF를 중심으로 ①근본적인 의무지출 혁신, ②부처간 과감한 유사중복 정비, ③현장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등 추진
⇒ '27년 예산안에 총 88개 개선과제, 44.2조원 효율화 반영

①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의무지출 제도개선 추진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32조 5,332억원 감축)

- (문제점) 그간 교부금은 ①내국세 연동에 따른 재정 불안전성, ②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③학령인구 감소 미반영 등의 한계 지적
- (개선)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산식 개편
 -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전 생애 주기(영유아-성인)에 걸친 전략적 교육투자를 확대

② 실업급여 지원효율화 (△1조 4,808억원 감축)

- (문제점) 일할 때보다 많이 받는 구직급여 역전현상 해소 및 조기재취업수당 사중손실* 우려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필요성 제기
 - * 지급제외 기준이 높아 수당이 없었어도 스스로 조기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지급
- (개선) ①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조정(주 7 → 6일 지급)하고, ②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을 하향(월 574 → 300만원) 조정

③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통합 (△5,078억원 감축)

- (문제점) 목적·대상이 유사한 현금성 지원사업이 분산 운영되어 수요자 불편·행정적 비효율·중복 지원 문제 발생
- (개선) 지원기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 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여 급여를 단순화하면서 지원 강화

② 부처·재원의 틀을 넘어 유사·중복사업 정비

①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4조 309억원 감축)

-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부처간 유사·중복 운영, 소액·나눠주기식, 저성과·관행적 지원 등의 문제 지속 제기
- (개선) 17개 부처 소관 472개 사업을 전면 검토하여, 232개 사업을 통폐합·감액 등 정비*하여 효율화

* 88개 사업 통폐합·폐지, 144개 사업 감액

② ICT 기금(정보통신진흥·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효율화 (△794억원 감축)

- (문제점)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내 ICT 기반 구축 사업 등이 분산되어 유사·중복 지적
- (개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역할 조정·일원화 등을 통해 47개 사업, 794억원을 효율화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비 (△187억원 감축)

- (문제점) 행안부와 농식품부 모두 온실 관련 정책보험을 운영함에 따라, 보험가입자 혼선 초래 등 유사·중복 지적
- (개선) 온실과 농작물을 모두 보장하는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여 유사·중복 제거 및 지원효율성 제고

④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23억원 감축)

- (문제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동포청 산하기관) 간 재외동포 대상 사업의 업무 유사·중복 문제제기
- (개선) 협력센터의 조직·기능을 동포청으로 통합하여 인력·예산을 효율화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재외동포 지원의 효과성 제고

③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 중심으로 지원 우선순위·방식 개편

① 국가장학금 전면 개편 (△2,100억원 감축)

- (문제점)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등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대학의 수가 대폭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 감소
- (개선)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폐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국립대·사립대학 학생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재투자

② 내일배움카드 개편 (△2,111억원 감축)

- (문제점)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단기·일반 훈련 외에도 AI·디지털 등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장기·심화훈련 수요 증가
- (개선) 일반과정 지원을 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을 현장 수요가 높은 AI·디지털 전환 대응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장기·심화훈련에 재배치

③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출효율화 (△2,751억원 감축)

- (문제점) 무공해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고장·미운영 충전시설의 사후관리 미흡 등이 지적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 ('23) 95.4 ('24) 81.0 ('25) 61.1

- (개선) 지원 규모는 축소하면서도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시설 관리 기준 마련 등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책 효과 제고

④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지출효율화 (△427억원 감축)

- (문제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지역 토지 매수·보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 지속 제기
- (개선) 토지매수는 축소하고, 환경 보호, 주민 소득증진과 연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전환

IV. '27년 지출효율화 추진방안

① 예산 프로세스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상시 추진 강화

- (상시 추진체계 확립) 올해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과 통합 운영하되, 예산·중기계획 일정에 맞춰 연간 운영체계 개편
 - (과제발굴 조기착수) 올해 11월부터 지원단을 구성,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여, '27년 지출효율화 과제 풀을 조기 확정
 - (개선방안 적기마련) 예산반영 필요 과제를 5월까지 집중논의·구체화하여 부처 예산 요구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성과평가 연계 강화)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제기된 사업별 개선 권고사항을 과제 풀에 포함·검토
 - 작업반 논의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연계

⇒ 지출효율화 TF를 중심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중기 재정계획-성과 평가를 긴밀히 연계·환류하여 효과적으로 지출효율화 추진

② AI 어시스턴트(지출돈보기)를 도입, 지출효율화 검토체계 고도화

- (과제발굴 효율화) 언론·국회·감사원 등 외부 평가·지적사항을 사업규모·유형별로 분석하여 주요 지출효율화 대상 발굴
 - 자체적으로 사업별 설명자료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유사·중복 사업 등 개편 필요사항 도출
- (개선방안 구체화) 발굴 과제 관련 유사사업 설명자료,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 보고서,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지원

⇒ 재정사업의 비효율을 신속·정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의 품질제고

③ 지출효율화 TF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

- (민간참여 확대) 지출효율화 TF에 민간위원 확대(기존83명 → 목표100명) 및 다양한 시민사회 추가 참여
 -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청년·지역 등 참여계층을 다변화
- (국민제안 반영)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효율화 관련 국민제안을 상시 접수, 효율화 과제로 적극 반영
 - 과제 발굴기간('26.11월~'26.12월) 중 집중 공모기간 운영 검토

⇒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지출효율화의 체감도·수용도 제고

V. 향후 추진일정

- 차년도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 착수 및 과제 풀 확정
: '26.11월~'26.12월
- 지출효율화 AI 어시스턴트(지출돋보기) 구축 : '26.12월
- 작업반 논의를 통해 구체적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 '27.1월~'27.5월
- '28 예산안 및 '27~'31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27.6월~'27.8월
- '28 예산안 및 '27~'3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 '27.9월
- '27~'31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발간 : '27.10월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2026. 10. 26.

기 획 예 산 처

순서

I. 추진 배경	17
II. 문제점	18
III. 추진 방향	19
IV. 주요 추진과제	20
1. 국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제도화	20
1. 예산반영 가이드라인 설정	20
2. 국민제안 창구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	21
3. 청년참여 확대	22
2.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23
1. 중앙·지방 연계 강화	23
2. 제도 사후관리 강화	24
3. 국민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의 선순환체계 구축	25
1. 재정교육 강화	25
2. 피드백 및 인센티브 강화	26
V. 향후계획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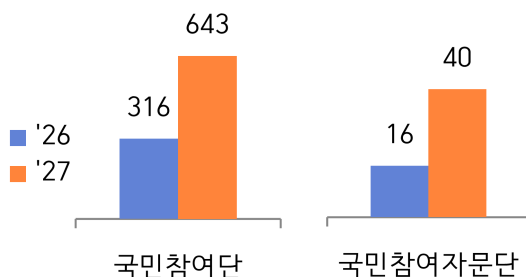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 국민참여예산제도는 '18년 도입 이래 총 298개 사업, 5,439억원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분야 대표적 국민참여제도로 안착
 - 특히, 올해 초 제안범위 확대, 국민참여단·자문단 확대 개편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27회계연도 국민제안 및 참여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
- * (제안) '26 517→'27 1,094건(2.1배), (규모) '26 9→'27정부안 21개 사업(2.3배), '26 137→'27정부안 3,010억원(22배)
- 그간 참여예산제도는 국민들의 재정과정에서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민선호 반영, 참여민주주의 구현 등 국민주권재정 실현에 기여
 - (국민선호 반영) 정책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일상속 불편 해소,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등 국민선호를 예산에 반영
- * 주요사례: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시범 지급('19, 국방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20, 농식품부),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26, 문체부) 등
- (참여숙의 민주주의 구현)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지속 다양화·확대하면서 참여·숙의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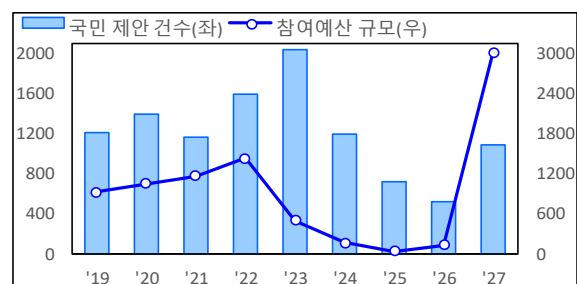
< 도입이래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국민제안 발굴) 대학교 및 공공장소 현장 제안접수('18), 토론형 참여예산('20~'24), 찾아가는 국민제안('20~)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제안 발굴
- (제안범위 확대) 기존 신규사업 발굴 위주에서 지출효율화 방안까지 범위 확대('26)
- (국민참여단·자문단 확대개편) 참여단 규모를 2배 확대하고(300→600여명), 자문단 규모(16→40명), 분야(4→8개) 확대 및 시민단체 추천인사 신규 포함('26)

< 국민참여단·자문단 규모 현황 >



< 국민참여예산 규모 추이 >



II. 문제점

- ① (참여예산 규모)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국민제안 및 예산반영 규모의 변동성*이 심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 저해

* ('19~'23 평균) 국민제안: 1,480건, 참여예산 규모: 52개 사업, 1,016억원 → ('24~'26 평균) 국민제안: 809건, 참여예산 규모: 12개 사업, 119억원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축소는 국민·부처의 참여 효능감을 저하

- ② (국민 참여과정 효율성) 국민참여 창구가 제한적*이며, 참여 피드백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정책 수요자(청년, 취약계층 등)의 참여 저조

*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전체 제안의 85%) 모집, '찾아가는 국민제안'으로 일부 보완

- ③ (참여예산 내용 적절성) 국민들의 중앙·지방사무 혼동, 기존 유사 사업 정보 부족 등으로 상당수 국민제안 부적격 처리*

* ('27) 사업발굴형 국민제안 866건 중 적격 65건(7.5%), 부적격 801건(92.5%)
(부적격 사유: 단순민원, 지방사무, 유사·중복사업, 제도·법령 관련 제안 등)

- 또한, 부처 소속기관·공공기관 등이 통상적인 예산절차 우회 및 특정사업 반영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제안 활용하는 경우 발생

- ④ (사후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 및 사업 집행관리 등이 미흡하며, 성과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인지도 및 신뢰도 낮음

- 참여에 대한 국민체감이 미흡하고, 참여예산 성과의 제도 환류 부족

◇ 국민참여예산 규모의 안정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참여과정의 민주성·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구현 강화 필요

Ⅲ. 추진 방향

목표	국민참여예산 질적 고도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

3대 정책 방향	① 국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제도화 ②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③ 국민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의 선순환체계 구축
----------	---

1. 국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제도화

예산 반영 가이드라인 설정	▶ 국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중기목표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창구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	▶ 찾아가는 국민제안, 토론형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방식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 강화
청년참여 확대	▶ 국민참여단 내 청년비중 확대 ▶ 청년정책 토론형 참여 확대 등 청년정책 제안 적극발굴

2.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중앙·지방 연계 강화	▶ 중앙·지방 참여예산 플랫폼 연계 및 소관 이관 ▶ AI 활용 적합창구 안내 등 국민제안 적격성 제고
제도 사후관리 강화	▶ 자문단 ^{가칭} 과정평가보고서, 집행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우수사례 중심 국민체감 성과홍보 강화

3. 국민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의 선순환체계 구축

재정교육 강화	▶ 일반국민 온·오프라인 재정교육 상시화 및 국민제안 연계 ▶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 및 참여예산 특화교육 확대
피드백 및 인센티브 강화	▶ 국민제안에 대해 단계적 피드백 제공 ▶ 우수제안 및 소관부처 담당자 표창·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IV. 주요 추진과제

1

국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제도화

(1) 예산반영 가이드라인 설정

◇ 국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중기목표 가이드라인 마련

1

현황

- 참여예산 양적확대에 비해 국민의 일상 속 숨은 정책 아이디어 사업화라는 제도취지에 미부합하는 경우 발생
- 참여예산 규모에 대한 안정성이 낮아, 국민들의 참여 및 부처의 사업발굴 의지 저해

2

개선방안

-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실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체감사업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 정부가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숨은 정책수요 발굴 및 사업화에 집중하여 국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질적 내실화 도모

< 국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안) >

- 개별 국민의 경험에 기반한 일상 속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개선 아이디어
- 차상위 취약계층 등 기존 복지지원제도 밖 정책 사각지대 발굴(경제성지능인 등)
- 과학기술 발전, 급변하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 기 추진사업의 경우 새로운 정책수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아이디어
-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제안 엄격 금지
- 개별사업 비중은 참여예산 전년도 총액대비 30% 이내(※'19~'26년 최대규모 사업 비중 평균 25%)

- (중기목표 가이드라인) 과거 실적, 국내외 사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예산 안정적 확대를 위한 중기목표 가이드라인 마련
- '19년 도입 이래 국민참여예산 규모 평균*(770억원)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 이상 지속 확대”를 중기목표로 설정
- * '19~'27년 중 최대('27년 3,010억), 최소('25년 50억) 제외 평균
- ※ 단, 국민제안 건수 및 적격 제안 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일정범위 내 탄력적 운영
-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국정과제 부합 여부, 정책 사각지대 해소, 국민체감도 등 정성적 기준도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 선정 지원

[2] 국민제안 창구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

◇ **찾아가는 국민제안, 토론형 국민참여** 등 제안창구 다변화, **온라인 플랫폼** **AI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제안 적극 발굴

1 현황

- 국민제안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전체 제안의 85%*)에서 모집되고 있고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국민제안’으로 일부 보완 중

* '27회계연도 국민제안 1,094건 중 플랫폼 929건, '찾아가는 국민제안' 165건

- 온라인 플랫폼 제안 시스템의 경우, 정책·재정 이해도, 디지털 활용 능력 등에 따라 정책참여 장벽 및 사각지대 존재*

*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디지털 장벽, 제안서 작성 어려움 등으로 제안 포기 등

2 개선방안

- (**찾아가는 국민제안**) 대면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제안발굴 확대

○ 현재 비정기적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 개별방문·인터뷰 위주
→ 정기적(월 1회) 다양한 정책대상별 현장간담회 등 병행 실시

- (**토론형 국민참여**) 특정 사회이슈에 대해 부처·전문가·일반국민이 함께 토론을 거쳐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국민참여’ 활성화

※ '20~'24년 제안형 외에 토론형 국민참여 일부 운영했으나, '25년 이후 제안형만 운영

< 참고: 토론형 국민참여 운영절차(안) >

- ① (사전주제 선정) 온라인 공모, 전문가·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토론주제 선정
- ② (일반국민 온라인토론)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일반국민 의견 및 제안 접수
- ③ (오프라인 토론회) 국민참여단·전문가·부처가 토론을 통해 사업을 설계

- (**국민제안 공모**)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 집중접수 공모 실시 및 우수제안에 대해 장관표창·포상금 제공

* 안전·교육 등 생활 밀접 주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이슈 등

- (**온라인 플랫폼 개선**) “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하여 제안 작성을 지원하고, 국민이 답하기 어려운 항목(예산추계 등)을 양식에서 제외

* (예시) ① 짧은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하면서 최종 제안서를 완성하는 단계별 작성 가이드, ② 키워드 작성시 AI가 질문을 통해 제안 내용 보완을 유도하는 방식 등 도입

[3] 청년참여 확대

- ◇ 국민참여단 내 **청년비중 확대**, **청년제안 적극 발굴**, **재정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결정권 강화

1 현황

- 청년층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참여예산제도 내 청년층 참여는 저조한 상황*

* 국민참여단 내 청년층 비중 20.7%(연령별 비율), 청년정책 우선순위 고려 없음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균형적 시각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

2 개선방안

-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확대**) 참여단 내 청년층 비중을 2배 수준 확대하여, 국민제안 사업화 및 선정에 청년의 결정권 강화

- 대국민 공개모집 및 연령별·지역별·성별 표본추출 등을 통해 청년(19~34세) 비중 확대(현행 20.7%, 120여명 → 개선 40%, 240여명)

- (**청년정책 관련 제안 발굴**) 청년 대상 찾아가는 국민제안, 토론행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정책 관련 제안 적극 발굴

- (찾아가는 국민제안) 각급 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지원), 청년미래센터(고립·은둔, 가족돌봄) 등을 방문하여 정책의견 수렴
- (토론행 참여) 청년정책·사업을 주요의제로 청년·전문가·담당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행 참여’ 활성화
-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층 주요 관심 분야 제안 적극 모집
- ※ 나라살림 타운홀미팅(‘26.4.28.)에서 공모전 등을 통한 청년참여 활성화 제안

- (**청년세대 재정교육 강화**) 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년층의 참여 역량 강화

- (**대면**) 1박 2일 합숙교육, 재정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등 청년층 관심도가 높은 체험형 교육 확대
- (**온라인**) 청년층 대상 주요 지원정책(일자리·창업·교육·자산형성·주거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콘텐츠 제공

2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중앙·지방 참여예산 연계 강화

- ◇ 국민·주민참여예산 플랫폼 통합화면 구축, AI 활용 적합창구 선택지원, 중앙-지방간 국민제안 소관 이관 등 참여예산제도 간 연계 강화

1 현황

- 국민들의 중앙·지방사무* 혼동, 플랫폼 안내 미흡 등으로 지방사무 관련 제안이 지속 접수 → 타당성과 무관하게 부적격 처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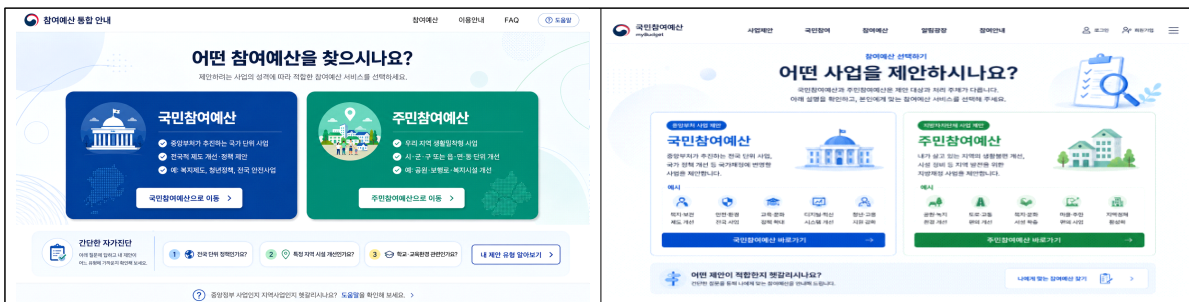
* '27 회계연도의 경우, 전체 제안의 약 15%인 126건이 지방사무 관련 제안

** 예시: 도로·교통신호 등 지역 인프라·시설 정비, 지역별 행사·지원제도 운영 등

2 개선방안

- (①플랫폼 접속단계) 중앙·국민참여-지방·주민참여 URL 링크 통합화면 구축
- 참여예산 접속시 두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통합 페이지로 우선 연결하고 적합한 참여예산 창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 국민·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안대상, 적격·부적격 주요사례, 검토주체 등 안내

< 국민·주민참여예산 통합 화면 예시 >



- (②제안작성 단계) 참여예산 플랫폼에 AI 도입 → 창구 선택 지원
- 작성단계 국민제안에 대해 특정단어 포함여부, 제안내용 등 기반, 과거 유사제안 및 부처검토 사례를 안내하여 적합한 창구 선택 지원
- (③제안제출 이후) 지방사무 관련 제안을 소관 지자체에 직접 이관
- 2단계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 제안이 최종제출된 경우, 이를 소관 지자체(확인 가능시)에 직접 이관

(2) 제도 사후관리 강화

- ◇ 자문단 ‘과정평가보고서’ 작성, 집행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성과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인지도 제고

1 현황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별도의 사후평가·관리, 정보제공이 없고, 적극적 성과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인지도 및 신뢰도 낮음
- * 현재 매년 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평가, 사업화 이후 이력관리 체계 미비

2 개선방안

- (자문단 과정평가보고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소과정에 대해 매년 자문단 「가칭과정평가보고서」 작성
- 국민제안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사업화 평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 작성하며,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정보공개) 「모두의 재정^{구축중}」,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등을 통해 참여예산 현황, 5개년 사업설명자료, 집행현황 등을 통합 제공
- * 모두의 재정에 국민참여예산 별도 메뉴 구성, 국민참여예산 플랫폼-모두의 재정 연계
- (집행현장 모니터링)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집행 등 재정 소과정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단 집행현장 모니터링 활성화
- (대국민 홍보강화) 다양한 국민친화적 홍보 콘텐츠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제고하고, 구체적 과정별 홍보* 및 성과 홍보 강화**

* 국민참여단 공모(1월), 토론형 국민참여 주제 공모(2월), 국민제안 집중접수(6월) 등

** 국민체감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한 국민참여 긍정 인식 확산

홍보수단	홍보내용(예시)
온라인	• 참여단 공모, 토론형 주제공모, 제안 집중접수 등 플랫폼, SNS 홍보 • 국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관련 홍보영상, 쇼츠, 카드뉴스 등 SNS 게재 • 국민참여예산제도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홍보 적극활용
오프라인	• 기차 객실 스크린, 부처·민간 보유매체(전광판) 등 홍보* * 국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참여방식 안내, 제도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등 • 대학·주민센터에 포스터 부착, 책자 비치 등 제도 홍보 협조 요청 • 국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책자 제작 및 대학·공공기관 배포 등
방송·기고	• 외부전문가 기고로 재정민주주의, 국민참여에 대한 긍정여론 확산 등

3

국민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의 선순환체계 구축

[1] 재정교육 강화

◇ 국민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 상시화 운영

1 현황

- 올해 일반국민에 대한 재정교육이 처음으로 도입 운영 중이나,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적 운영되며, 국민참여예산제도 연계 미비*

* 참여단의 경우에는 '예산학교'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정관련 일반적인 내용 교육

2 개선방안

- (일반국민 재정교육) 일반국민 대상 전면적 재정교육 상시화 운영

① (상시학습) 일반국민 온·오프라인 상시 재정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이후 정책제안(참여예산 등)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온라인) 수요자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강좌 콘텐츠 제작 및 재정 분야별(예타, 민투, 성과관리 등) 심화 교육콘텐츠 제작

* 연령대 눈높이에 맞춰 롱폼(마스터강좌), 숏폼(마이크로러닝), 교육워크시트(교재) 공개

- (오프라인) 지방시민사회 연계 '찾아가는 재정교실' 운영, 수도권글로벌 재정역량개발센터(홍릉)*를 신설하여 재정교실 상시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에 일반인을 위한 상시적 교육공간 마련하고 참여형 학습운영

② (맞춤형 교육)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특화 대면교육 확대·신설

- (초등학생) '찾아가는 재정캠프' 확대·운영, (중·고등학생) 여름방학 기간 재정교육 합숙캠프 실시 및 진로탐색 연계 특화 과정 신설

- (대학생) 집합교육 및 경진대회(데이터분석, AI활용 재정콘텐츠 등) 개최

- (참여단) 참여단 전용 교육과정(온라인·대면)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집행, 사업설명서 등 예산 수과정 교육 실시 및 활동*에 연계

* 국민제안사업 검토, 우선순위 투표, 토론형 국민참여, 집행현장 모니터링 등

(2) 피드백 및 인센티브 강화

- ◇ 국민제안 **피드백 강화**, **우수제안 포상**, **국민정책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신뢰성 및 참여 효능감 제고

1 현황

- 국민제안에 대한 **피드백 부족***, **참여 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국민들의 **참여 효능감이 낮고**, **적극적 참여유인 부족**

* 국민제안 적격여부 부처 답변(플랫폼) 외, 사업화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 현재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출효율화 우수제안만 포상('26년부터)

2 개선방안

- (**국민제안 피드백 강화**) ①제안검토 및 사업화 과정, ②사업화 이후 단계별로 제안자에 대해 **지속적 피드백**을 제공

- (**제안검토·사업화 과정**) 제안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부처답변 외 자문단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수용성 제고 및 제안 수정기회 부여
- (**사업화 이후**) 적격제안의 **사업화 내용**, **예산반영 여부**를 안내하고 국민참여단 집행현장 모니터링에 초청*

* 제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여부 등을 제안자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제시

- (**국민참여 인센티브**) 사업발굴형 제안을 포함하여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포상하고, 국민정책실명제 도입

- (**우수제안 표창·포상**) 최종 예산반영된 제안을 대상으로 국민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표창·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일반국민 온라인 투표 및 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우수제안 선정

- (**국민정책실명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사업설명자료에 국민참여예산 사업별 **제안자 실명 기재**(제안자 희망시)

- 대국민 홍보영상,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부처 인센티브**) 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한 소관 부처 담당자를 ^{가칭}국민참여우수직원^{가칭}으로 선정하여 장관표창 및 포상금 지급

V. 향후계획

□ **(지침 개정)** 제도개선 반영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개정('26.12월)

○ 중기목표 가이드라인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지침 반영

< '28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안) >

- (예산반영 가이드라인) 국민참여예산 중기목표·사업선정 가이드라인 안내
- (토론형 국민참여) 토론형 국민참여 일정·절차 및 소관부처 협조 요청사항
- (우수제안 포상) 사업발굴형 우수제안에 대한 표창·포상금 지급 기준 등

□ **(온라인 플랫폼 개편)** 통합화면 구축, AI 도입 등 중앙·지방 연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전면개편

❶ **(통합화면 구축)**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내 중앙국민참여-지방주민e참여 통합화면 구축·운영('26.12월)

❷ **(AI 도입)** 중앙-지방사무 적합창구 선택지원, 유사중복 사업 제시, AI 제안작성 도우미 도입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AI 도입 추진('27.上)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정책 과제	추진계획	시행시기
1. 국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제도화		
❶ 예산반영 가이드라인 설정	▪ (지침 개정) '28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증기목표 및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안내	'26.下
❷ 국민제안 창구 다변화 및 접근성 강화	▪ (지침 개정) 토론형 국민참여 일정·절차 및 소관부처 협조 요청사항 포함 운영지침 개정 ▪ (운영) 토론형 국민참여 주제 공모(~'27.2) 및 온라인 토론방 운영('27.2~4) 등	'26.下 지침개정 '27.上 시행
❸ 청년참여 확대	▪ (운영)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확대 및 토론형 참여, 공모전 개최 등 청년제안 집중발굴	'27.上
2.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❶ 중앙·지방 참여예산 연계 강화	▪ (관계기관 협의) 중앙·지방정부 참여예산 연계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 행안부·지방정부 협의	'26.下
❷ 제도 사후관리 강화	▪ (운영) 국민참여자문단 ^{가칭}과정평가보고서 작성 ▪ (운영) 국민참여예산제도 대국민 홍보 실시	'26.下~
3. 국민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의 선순환체계 구축		
❶ 재정교육 강화	▪ (운영) 일반국민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및 국민참여단 특화교육 프로그램 마련	'27.上
❷ 피드백 및 인센티브 강화	▪ (지침 개정) 사업발굴형 우수제안 및 국민참여예산 적극부처 담당자포상 기준 마련	'26.下

['28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일정(안)]

제도개선 및 운영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내 중앙·지방 참여예산 통합화면 구축	'26.12월
	제도개선 사항 반영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개정 및 배포	'26.12월
	예산국민참여단 공개모집	'27.1월
	일반국민 재정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속
국민제안 사업화	국민참여예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7.3월
	토론형 국민참여 운영	'27.2~4월
	국민제안 집중접수	'27.4월
	국민참여자문단 사전검토	'27.1~5월
	소관부처 사업화 완료	'27.5.31.
	국민참여예산 사업설명회	'27.6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실시	'27.7월
집행점검 및 제도 사후평가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27.9~12월
	국민참여자문단 ^{가칭}과정평가보고서 작성	'27.12월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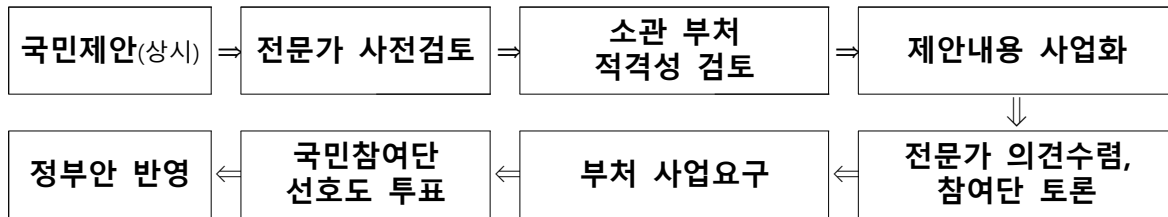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

- ☐ (의의) 정부 예산 수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18년 도입, 국가재정법 제16조, 시행령 제7조의2 의거)
- ☐ (참여자격)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 (제안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에서 제안
- ☐ (제안기간) 연중 상시 접수
- ☐ (제안범위) ①사업발굴형, ②지출효율화형* 제안
 - * '26년 예산 편성시부터 도입('25.7월~)

① 사업발굴형: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 단순 민원, 재정소요 없는 규제철폐, 지자체 사업, SOC 등 대규모 사업 등은 비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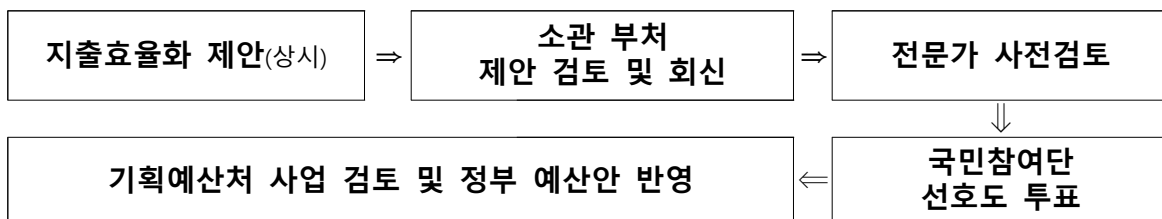
- (절차) 소관부처가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적격제안에 대해 국민 참여단 토론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예산 사업화



※ '26.4월 접수분까지 '27년도 예산 반영, '26.5월 이후 접수분은 '28년도 예산으로 검토

② 지출효율화형: 중앙정부 예산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관행적 예산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절차) 소관부처가 검토 후, 제안사업에 대해 국민참여단 토론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지출구조조정 등에 반영



※ '26.6월 접수분까지 '27년도 예산 반영, '26.7월 이후 접수분은 '28년도 예산으로 검토

□ (운영성과) 도입 이래 298개 제안에 총 5,439억원 규모 예산 반영

○ '27년 정부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 반영(21개 사업, 3,010억 원)

< 연도별 국민참여예산 제안 건수 및 예산 반영 규모 추이 >

회계연도	'19	'20	'21	'22	'23	'24	'25	'26	'27정부안
국민 제안(건)	1,206	1,399	1,164	1,589	2,043	1,191	718	517	1,094
적격 건수(건)	160	109	145	171	82	83	23	17	65
예산 사업(개)	38	38	63	71	51	13	15	9	21
반영 예산(억원)	928	1,057	1,168	1,429	500	170	50	137	3,010

□ (주요 반영 사업)

○ 사업 발굴형

회계연도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액(억원))
'19년	•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산림청 300) • 장병 패딩형 동계 점퍼 시범 지급(국방부 70)
'20년	• 다함께 돌봄사업(복지부 156)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농림부 91)
'21년	• 디지털 병리기반의 암 전문 AI분석 솔루션 개발(복지부 72) • 새일여성인턴(여가부 88)
'22년	•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국토부 402) •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보강(소방청 63)
'23년	• 정보소외 지역 SW 교육 지원 강화(과기부 80) •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정비(환경부 38)
'24년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과기부 60)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교육부 16)
'25년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정책 기획·홍보(행안부 8)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여가부 6)
'26년	• 모바일 실시간 전자증명 서비스 환경 조성(과기부 30) • 해양재난구조대 지원(해경청 79)
'27년	•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과기부 2,500) •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기후부 13)

○ 지출효율화형

회계연도	주요 제안내용
'26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성과 미흡, 다른 사업과 유사 • (민관협력사업 ODA) 예산규모가 전체 비영리단체 지원 예산 대비 과다
'27년	•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예산절감액을 전투력 강화에 활용

참고 2

국민참여예산 규모 현황

(단위: 건수-개, 금액-억원)

회계 연도	구분	제안현황(건)		참여예산규모					
		전체	적격 제안	요구		정부안		국회최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년	계	1,206	160	102	1,692	39	835	38	928
	제안형	1,206	160	102	1,692	39	835	38	928
	토론형	-	-	-	-	-	-	-	-
'20년	계	1,399	109	96	2,663	38	1,114	38	1,057
	제안형	1,399	109	83	1,921	-	-	30	489
	토론형	18	-	13	742	-	-	8	568
'21년	계	1,164	145	153	5,405	63	1,199	63	1,168
	제안형	1,164	145	116	4,136	-	-	43	891
	토론형	37	-	37	1,269	-	-	20	277
'22년	계	1,589	171	190	5,843	71	1,414	71	1,429
	제안형	1,589	171	139	2,779	-	-	48	548
	토론형	73	-	51	3,064	-	-	23	880
'23년	계	2,043	82	118	2,862	51	482	51	500
	제안형	2,043	82	75	1,958	33	312	33	311
	토론형	43	-	43	904	18	170	18	171
'24년	계	1,191	83	50	1,295	13	132	13	170
	제안형	1,191	83	39	1,177	13	132	13	170
	토론형	17	-	11	118	-	-	-	-
'25년	계	718	23	27	252	15	50	15	50
	제안형	718	23	27	252	15	50	15	50
	토론형	-	-	-	-	-	-	-	-
'26년	계	517	15	15	299	11	150	9	137
	제안형	517	15	15	299	11	150	9	137
	토론형	-	-	-	-	-	-	-	-
'27년	계	1,094	65	43	3,813	21	3,010	-	-
	제안형	1,094	65	43	3,813	21	3,010	-	-
	토론형	-	-	-	-	-	-	-	-

참고 3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 **개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의의) 지자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 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조례로 정하는 방법

-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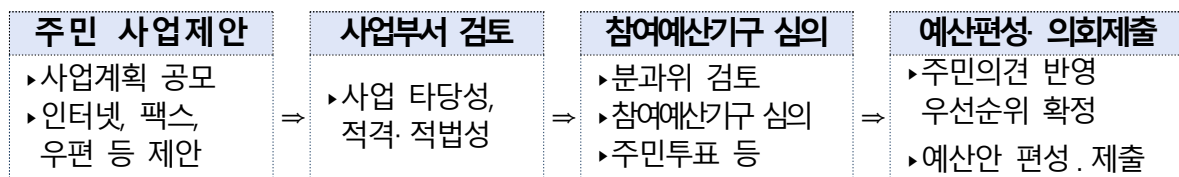
※ 243개 시·군·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 (경과) '05년 제도 도입 후 '11년 제도 운영 의무화, '18년 예산全过程으로 주민참여 범위 확대, '24년 온라인시스템 '주민e참여' 개통

- (사업 유형)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사업**으로 구분·운영

* 주민 또는 주민자치회가 사업 제안 ** 사업부서 요구사업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예산 반영

< 주민제안사업 참여 절차 (예시) >



□ 국민참여예산제도와의 관계

-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은 제안 대상, 접수기간·방법, 운영 및 검토주체 등이 상이하며, 연계 없이 별개의 제도로 운영 중

< 국민·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 >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9조
운영주체	기획예산처	243개 자치단체
제안 대상	중앙정부 재정 관련 신규사업, 지출효율화 방안 등	지방정부 재정사업 등
제안 접수방법	국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	지자체별 플랫폼·이메일·현장 및 행안부 '주민e참여' 시스템*
제안 접수기한	상시 접수	지자체별 상이**
제안 검토주체	소관 부처	243개 자치단체

* 현재 243개 자치단체 중 231개가 '주민e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안 접수 중이며, 12개 지자체는 별도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운영하며 '주민e참여'에 링크 연결

**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중 1~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며, 일부만 상시 접수